

시민 101

CITIZEN 101

홍재은 (Jaeun Hong)

프롤로그

모든 것의 시작은 질문의 부재였다. 혹은,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막연한 깨달음이었다. 내가 이 글을 써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은 거창한 사명감이나 정치적 신념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극히 사적인, 그러나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내 삶의 풍경들 때문이었다. 교실과 택시,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한 우리 사회의 맨얼굴은 나에게 ‘시민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나의 중3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다. 그 열기는 교실 안까지 스며들어, 이제 막 자아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우리들을 들뜨게도, 혹은 날카롭게도 만들었다. 여느 때와 같이 지루한 수업이 끝나고 찾아온 성교육 시간. ‘성(性)’이라는 단어 하나에 교실의 공기는 미묘한 흥분으로 술렁였다. 선생님은 익숙하게 유튜브를 켜고 교육 영상을 재생했다. 문제는 영상이 아니었다. 영상의 첫머리에 선명하게 떠오른 ‘여성가족부’라는 로고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 순간, 교실 뒤편에 앉아 있던 남학생 몇몇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투덜거림이 아니었다. 스크린을 뚫을 듯한, 그리고 영상을 틀어준 여선생님을 향한 날 선 적의였다. 한순간에 교실은 얼어붙었다. 술렁이던 공기는 싸늘하게 식었고, 모두가 눈치만 살폈다. 나는 그때 그들의 분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이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프레임에 대한 반발심이라는 것을 어렵듯이 짐작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내가 본 것은 단순히 몇몇 학생의 불만이 아니었다. 정치권이 선거라는 판 위에서 젠더를 ‘이슈’로 소비하고, 그 과정에서 증폭된 갈등과 혐오가 가장 순수해야 할 교실의 한복판까지 여과 없이 침투한 장면이었다. 우리는 이미 어른들의 전쟁에 동원된 어린 병사들이었다.

그날 이후, 보이지 않던 선이 교실을 갈랐다. 그룹 활동을 위해 조를 짤 때면, 아이들은 마치 자석의 같은 극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밀쳐졌다. 함께 과제를 해결해야 할 동료가 아니라, 평가하고 경계해야 할 타인이 되었다. 여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남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했고,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여성 혐오적 발언을 그대로 뒤집어 미러링을 통해 서로를 공격했다. 남학생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만의 노트에는 전교 여학생들의 이름과 함께 외모 순위가 빼곡히 적혔다. 교실 안에서 펼쳐진 이 작은 전쟁은 과연 미성숙한 아이들의 치기 어린 장난으로만 볼 수 있을까. 나는 매일같이 벌어지는 이 소모적인 다툼 속에서 우리 사회의 비극적인 자화상을 보았다. 온라인에서 떠돌던 익명의 혐오가 교실이라는 현실 공간을 잠식하고,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던져놓은 갈등의 씨앗이 학교라는 교육공간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서로를 동료 시민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었고, 나의 세계는 교실을 넘어 조금 더 넓어졌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보이지 않는 선과 벽은 존재했다. 어느 새벽 1시, 학원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택시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자 바깥세상의 소음이 아득해졌다. 안도감도 잠시, 미터기에 찍힌 ‘할증 40%’라는 붉은 숫자에 나도

모르게 ‘헉’ 소리를 냈다. 백미러로 나를 힐끗 보신 기사님은 혀를 차며 말했다. “요새 젊은이들은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멧쩍게 고등학생이라고 말하자, 기사님의 표정은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다. 장래 희망을 묻는 그의 말에 “정치학과에 가고 싶다”고 대답한 순간, 택시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바뀌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그의 목소리에 열기가 실리기 시작했다. “내가 학생이 정치학과 간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로 시작된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얼마나 국민을 위하는지, 파면된 윤석열은 얼마나 부패했는지에 대한 일방적인 연설이었다. 나는 그의 정치적 견해에 반박하고 싶은 마음보다, 그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했다. 어떤 사실과 근거가 저토록 뜨거운 목소리를 만드는 걸까.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물었다. “혹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달아올랐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나의 질문은 그에게 무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요새 사람들은 따지기 참 좋아해. 어른이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 지혜도 필요한 거야.” 그는 질문에 대한 답 대신 자신의 왕년 시절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겪어봤는지를 설명하며,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자신의 경험’이라는 권위로 포장하려 애썼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흔들리는 택시라는 좁고 폐쇄된 공간 안에서, 나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을 목격했다. 이곳에는 토론이 없었다. 오직 일방적인 선언과 권위적인 묵살만이 존재했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합리적 질문은 ‘버릇없는 따짐’으로 치부되었고, 다른 의견은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

하지만, 이 갈등은 교실과 택시를 넘어, 가장 가까운 친구 관계까지 파고들었다. 어느 날, 나는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2025년의 계엄령 사태 이전까지 정치에 무관심했던 내 친구는, 그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정치에 눈을 떴다. 하지만 그의 새로운 관심은 스스로의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부모님의 견해를 그대로 물려받아 급하게 쌓아 올린 정체성에 가까웠다. 어느새 그녀는 친구들과 모인 인스타 디엠방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열정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한때는 시시콜콜한 농담으로 가득했던 그 챗방은 날 선 단어들이 오가는 이념의 전쟁터가 되었다. 견해가 다른 친구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견고해 보였던 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도대체 무엇이, 이제 막 열아홉이 된 우리로 하여금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걸까. 왜 우리는 한 사람의 정치적 신념을 근거로 그의 인성과 사고방식 전체를 손쉽게 판단해 버리는가. 아직 사회에 온전히 발을 들이지도 않은 청소년들의 얼굴을 그토록 붉히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날 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뉴스에 나오는 광화문 광장이나 국회 의사당 같은 거대한 무대 위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위기는 이미 내 삶 가장 가까운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서로를 혐오의 언어로 규정하는 교실, 근거 없는 확신에 찬 목소리만이 가득한 택시 안, 그리고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 밀어내야 했던 대화방. 그 모든 풍경 속에서 질문하는 법을 잊어가는 나 자신이 바로 내가

마주한 민주주의의 위기였다. 이 책은 그 위기감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나의 첫 번째 대답이다.

“질문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나의 첫 번째 대답.” 이 문장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겪어온 모든 혼란과 단절의 순간들을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그 시스템에 무감각하게 종속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때의 나는 대한민국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분명한 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지금도 믿는다. 이 선들은 때로는 세대 사이에, 때로는 성별과 성별 사이에, 그리고 때로는 다른 정치적 신념 사이에 칼로 그은 듯 선명하게 존재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뻗뻗하게 그어져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나름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자각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큰 모순일지 모른다. 나는 이 모순의 근원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돌이켜보았을 때, 내가 마주했던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우리가 서로를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택시 안에서 나의 질문이 ‘버릇없는 따짐’으로 치부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공간에서 나는 토론의 상대방인 동등한 ‘시민’이 아니라, 일방적인 가르침의 대상인 ‘어린 학생’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혐오의 언어가 오가던 교실은 왜 둘로 갈라졌을까? 우리는 함께 문제를 고민해야 할 동료 시민이 아니라, ‘남학생’과 ‘여학생’이라는 적대적 집단으로 서로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돈독했던 친구 관계에 금이 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다른 견해를 가진 시민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대신, 나와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진 ‘적으로 규정된 타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로

모였다. '시민'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이 지워진 자리에, 권위와 편견, 혐오라는 또 다른 선들이 그어지고 있었다.

내가 목격한 이 일상 속의 균열들은, 국가의 법과 제도가 아무리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하거나 유지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줬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의 틀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호작용 속에서, 즉 서로를 존중하는 시민성(civility)과 공공의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속에서 비로소 숨 쉬고 성장하는 유기체와 같았다. '민주적 시민' 없이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민은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찰과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나를 한탄 속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다. '왜 우리는 서로에게 시민이 되어주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시민으로서 공존하고, 민주주의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가?'라는 더 깊은 물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절감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 <Citizen 101>의 여정은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데 있어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문적인 질문과 탐색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혼란과 무력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위협받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낼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참여자로 나와 같은 젊은 세대가 거듭나도록 영감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민주주의는 누구의 것인가

2024년 12월 3일 밤, 그때 당시 나는 친구와 함께 제주도에 있는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카페에 있었다. 겨울의 초입이었지만 제주는 여전히 온화했고, 카페 안에는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친구와 나는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학업과 미래, 그리고 사소한 일상들을 주제로 여느 때와 같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빨강 파랑으로 양극화된 정치에 눈이 희번덕여지는 현재와 달리,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온전히 우리들의 이야기에만 머무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카페 한편에 걸린 작은 TV 화면에서 속보 자막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어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굳은 얼굴. 대통령은 엄숙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카페 안의 잔잔한 음악은 어느새 웅성거림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TV 화면에 고정되었다. 사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도대체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계엄령을 하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 말에 다른 손님들도 동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순간만큼은 카페 안 모두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는 듯했다. 나에게 ‘계엄령’이라는 단어는 그저 학교 역사책 속에서나 보던, 아득한 과거의 유물 같은 것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5.18 민주화운동과 박정희 시대의 비상계엄은 너무나 멀리 있는 이야기여서, 아무리 그 의미를 되뇌어도 현실과는 좀처럼 연결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흑백 사진 속의 그림자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무관한 과거의 잔재로만 여겨졌다. 그렇기에 나는 그날 밤 벌어진 일이,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을 넘어 앞으로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극심한 정치적 갈등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충격적인 선포는 나에게 ‘모든 것의 시작은 질문의 부재였다. 혹은,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막연한 깨달음이었다”라는 문장이 던지는 통렬한 의미를 알려주었다.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 보였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상에 가까웠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취약점과 위태로움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처음으로 직면하게 된 순간이었다. 법과 제도가 견고하게 작동한다고 믿었던 우리의 민주주의는, 불과 몇 분 만에 한 사람의 선언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건물과 같았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한 줄기 희망은 있었다. 불과 6시간 만에, 국회는 압도적인 표차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대한민국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발적인 저항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휴대폰 속 실시간 뉴스는 공포에 질려 숨죽이던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놀라운 결말을 보여주고 있었다. 계엄령은 철회되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극단적인 두 얼굴을 보여주었다. 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유린될 수 있는지, 동시에 그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회복탄력성과 강인함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동시에 목격한 것이다. 그날 이후,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곳곳에 보이지 않는 균열과 단층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 균열 속에서 질문했다. 과연 이 민주주의는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나는, 우리는, 과연 어떤 ‘시민’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두 교육 체계 사이에서, 질문할 권리와 침묵할 의무를 동시에 배웠다. 이 모순적인 경험 뒤에는 각국의 교육철학과 역사적 배경이 깊이 자리잡고 있었다. 내가 들었던 하나의 수업 중 하나인, 미국의 AP US Government 수업은 토론과 참여, 비판적 사고를 중심에 둔다. 수업의 핵심은 학생들이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헌법, 인권, 시민의 권리와 의무, 지역사회 참여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사회적 쟁점에 참여해보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긴다. 단순히 정부 구조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제도가 필요한가?, 시민의 정의는 무엇이고 대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학생들은 연방주의자 논집 10번, 브루투스 1, 독립선언서 등의 원문을 직접 읽고 분석하며, 마버리 대 매디슨,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같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배운다. 이러한 교육의 목표는 명확하다. “교실 내 교육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영국의 크릭 보고서가 제시한 시민교육의 3대 요소인 사회·도덕적 책임, 공동체 참여, 문해력이 미국 시민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반면, 한국의 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덕/윤리 교육은 전혀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유교적 전통과 ‘인성(inseong)’이라는 개념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공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이 교육 철학은 도덕성, 인간관계, 정의, 성실성을 강조하며, “인성교육의 본질은 삶과 삶의 문제를 도덕적·모범적 차원에서 실천 수행하는 데 있다”고 본다. 한국의 도덕교육에서 중시하는 핵심 가치들을 살펴보면 그 특징이 명확해진다. 효,

예, 정직, 협동과 같은 덕목들은 개인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집단적 조화와 질서를 우선시한다. 유교에서 말하는 '인(仁)'은 단순히 개인적 덕목이 아니라, "나와 남은 비록 육체적으로 독립된 개체이지만, '나'라는 주체에 이미 '남'이라는 객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관계적 사고에 바탕한다. 이러한 교육 철학은 상하 관계의 질서를 중시한다. 부모에 대한 효도, 스승에 대한 존경, 웃어른에 대한 공경이 핵심 덕목으로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순응과 모범이 미덕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이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효와 예, 정직과 협동은 분명히 필요한 덕목이며,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 역시 소중하다. 하지만 현대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결정적인 한계가 드러난다. 첫째, 이 교육은 덕목 중심의 주입식 암기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스스로 고민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정답을 외우는 데 익숙해진다. 둘째, 비판적 사고 능력의 부족이다. 한국의 도덕교육은 "대체로 덕목 중심의 교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덕목만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미묘하고도 복잡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덕목 교육은 사고 능력을 함양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권위에 대한 순응을 강조하는 구조적 문제다. 유교적 전통에서 중시하는 상명하복의 질서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요구되는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시민성과 충돌한다.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효, 예, 애국심 등 봉건적/수직적 질서로 회귀하는 소극적 시민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시민들이 "신민적 태도를 내면화해 왔기에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결과를 낳았다. 넷째, 참여적 시민성의 결여다. 한국의 도덕교육은 주로 개인의 품성 함양에 집중하지만,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역량을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민교육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시민을 계몽의 대상하기보다 인식의 주체, 실천의 주체로 보는” 관점이 부족하다. 다섯째, 형식적 민주주의에 안주하는 문제다.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를 형식이나 절차로만 이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며, 이는 교육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어른의 민주시민적 결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교육 방식의 차이는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2016년 ICCS(국제 시민성 및 시민교육 연구) 조사에서 한국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이슈 참여율은 참가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학생들의 시민지식 점수는 높은 편이었지만, 실제 참여 의지는 현저히 낮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시민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적극적 정치참여의사가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한국은 이와 정반대의 패턴을 보였다. 즉,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는 뜻이다. 고등학교 정치 교과 내용을 한국과 미국을 직접 비교한 연구에서도, 한국은 시민의 역할이나 참여 기술, 보편적 민주주의 원칙 같은 핵심적인 시민적 내용(civic content)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구의 시민교육이 인권, 다양성,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시민적 참여를 강조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도덕/윤리 과목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실제 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결국 양쪽 교육을 모두 경험한 나 같은 학생은, 한편으로는 참여와 질문에 익숙해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순응과 모범을 내면화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적응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제학교 교실에서는 친구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게 자연스러웠다. 선생님도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논쟁하는 것을 적극 장려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다른 관점은 없을까?"라는 질문이 일상적이었다.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이었다. 반면, 한국 교실에서는 질문보다 순응이 미덕이었다. 선생님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교과서 내용에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버릇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도덕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보다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 전달이 주를 이뤘다.

이 시민교육의 간극은 나 같은 국제학교 학생에게 선택이 아니라 과제였다. 계속 나에게 "어떤 시민이 되어야 하나"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미국식 교육에서는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시민이 되라고 하고, 한국식 교육에서는 조화롭고 모범적인 시민이 되라고 한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문화적 차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내 시민적 정체성과 사회참여 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였다. 한국 사회에서는 비판적 질문을 하는 사람이 "사회 질서를 해치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쉽고, 미국 사회에서는 순응하는 사람이 "주체성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기 쉽다. 결국 이 교육 체계의 차이는 각각이 추구하는 시민상의 차이를 반영한다. 미국은 "질문하고 참여하는 시민"을 기르려 하고, 한국은 "조화롭고 모범적인 시민"을 기르려 한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둘이 모두 필요하다. 문제는 어떻게 이 두 가치를 조화롭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 속에서, 나는 앞으로 펼쳐질 2016년 촛불집회와 2025년 계엄령 사태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시민성을 내면화하는가의 문제였던 것이다.

시민, 경계 위에 서다.

시민권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출생과 함께 받은 종이 한 장이 아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출생증명서가 나오고, 이것만으로도 미국 시민임을 증명한다. 하지만 시민권의 실체는 훨씬 복잡하다. 시민권은 겹겹이 쌓인 권리들의 다층 구조다.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같은 시민적 권리, 투표하고 공직에 나설 수 있는 정치적 권리, 그리고 교육받고 의료 혜택을 누리며 안전한 주거지를 보장받는 사회적 권리가 서로 얹혀 있다.

실제로는 경계 밖에 선 사람들이 항상 존재해왔다. 고대 아테네에서 여성과 노예는 시민이 될 수 없었다. 19세기 미국에서 흑인들은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참정권을 박탈당했고, 중국계 이민자들은 1882년 중국인 배제법으로 시민권 자체를 거부당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어떨까? 이주노동자들은 세금을 내고 경제활동을 하지만 선거권은 없다. 탈북민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실제로는 “경계인적 지위”에 놓여 있다.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가 미국에 정착하려면 “망명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성공률은 고작 2~5%에 불과하다.

과거의 시민을 정의했던 경계선이 점점 넓어지고 있듯이, 시민권의 정의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21세기에는 새로운 권리들이 등장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시민권이다. 유럽의 GDPR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내려받고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서, 내가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의미한다. 내가 검색한 기록, 구매한 물건, 이동한 경로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는 시대에, 이 정보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통제할 권리는 새로운 시민권의 핵심이 되었다. 또 다른 예는 기후 시민권이다. 기후변화가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안전한 기후를 누릴 권리가 새로운 시민권으로 부상했다. 이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에너지 절약 행동에 참여”하며, “탄소배출을 염두에 둔 소비습관”을 갖는 것을 새로운 시민의 의무로 만들었다. 즉, 환경을 지킬 권리와 의무가 시민성의 새로운 요소가 된 것이다. 하지만 권리의 확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기술 발전이 시민권을 축소시킬 위험도 있다. 시카고 경찰이 빅데이터로 “잠재적 강력범죄자 400명”의 명단을 만들어 미리 경고를 보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사람을 알고리즘이

‘위험인물’로 분류하고, 경찰이 이를 근거로 감시를 강화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기본적인 시민권이 훼손된다. 정보가 권력이 된 시대에, 내 정보를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시민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 투표권이 있어도 내 정치적 성향이 데이터 분석으로 조작당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어도 내 발언이 AI에 의해 검열당할 수 있다면, 전통적인 시민권은 공허한 껍데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시민권은 법적 지위가 아니라 끊임없는 협상의 산물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시민권을 만들어가야 하고, 동시에 기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

누가 포함되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둘러싼 경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 경계는 시민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요구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확장된다. 2016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약 1,700만 개의 촛불이 그랬고, 2025년 계엄령에 맞서 새벽에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의 발걸음이 그랬다. 시민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묻게 된다. 과연 나는, 우리는, 어떤 시민이 되어야 하는가?